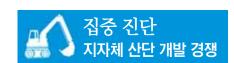
묻지마 개발 안 멈추면 '빚더미 재앙'… 산단정책 전면 재검토를



〈하〉 개발방식 바꿔야

영광군은 민간자본 1677억원, 도·군비 45억원 등이 투입돼 165만2000㎡의 면적에 조성된 전기자동차산단 내 업체들이 모두 가동하면 연간 생산유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85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마해다

1162억원이 든 광양신금산단은 4000여명의 인구 유입, 매년 약 2억6000만원의지방세수입 등을, 220억원이 투입된 목포세라믹산단은 500여명의 고용유발, 1700억원 상당의 경제파급을 약속했다. 역시538억8500만원의 세금으로 지은 화순의약생물단지는 1265명의 고용유발, 2582억원의 경제파급을, 나주일반산단은 상근인구 2476명이 유입될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준공 후 1~4년이 지난 이들 산 단을 조성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는 미분 양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 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역미래 발전의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졌던 산단 개발이 오 히려 지역의 미래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 초기 한국산업표 준분류에서 면적 당 각 업종별 근무인원 을 일률적으로 대입해 산출해낸 고용유발 과 근거도 불분명한 경제파급을 과장 발 표하며, 개발에 나섰다. 수요에 대한 고려 고금리 돈 빌려 마구잡이… 금융기관만 수익보는 구조 미분양 쌓여가는데 전남지역 18곳 효과 부풀려 추진

없이 대규모로 공급한 뒤 기업을 유치해

분양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전남지역 일반산업단지 32곳 가 운데 모두 분양된 곳은 나주문평산단 등 4 곳에 불과하다. 이들 산단은 10년에 이르 는 조성기간, 수요자 중심 개발 등의 특징

반면 1994년 조성이 시작된 나주일반산 단 이후 미분양 산업용지는 계속 쌓여가

미분양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시· 군들이 무리하게 산단 조성에 나서면서 저 금리시대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보증 등 갖가지 조건으로 고금리 자금을 빌려쓰 며, 지자체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투자협약 건수, 분양률 등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정해가며 위기를 숨기고 있으나 무분별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조만간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예산(본예산 일반회계)이 4926억원 규모인 목포시의 경우 5.2%의 금리에 2902억원을 차입해 오는 2016년 2월 대양산단준공시점에는 2902억원의 절반인 1451억원을 완납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산단 개발을 위한 차입, 채무보증으로 주민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산단 빛' 갚는데 지출해

야할 판이다.

신금산단개발(주) 관계자는 "현재의 산 단 조성방식은 업체는 물론 지자체 모두 피해를 보고 금융기관만 수익을 보는 구 조"라며 "산업용지가 필요한 업체와 협약 을 맺고 그 수요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지역에 조성중인 15곳, 착공 준비중인 3곳 등도 모두 수요에 대한 감안 없이 '부풀린' 고용유발 및 경제파급, 추정 치나 계획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미분양 산단면적이 갈수록 늘 어나자 국가가 산업용지를 비축하는 제도 를 최근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해줄 것을 의뢰했다. 과잉 공급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회복 시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한 전문가는 "이 제도는 공급을 멈추는 조건 하에 연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 급 과잉이 계속되고, 지자체는 채무 이행 을 서둘러 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시·군 및 관련기관 등이 추진 하고 있는 산단 전반을 재검토해 정책 전 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 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지역 산단 계획 당시 고용효과 추정치와 현재 비교

시군	단지명	경제파급효과	교용유발효과	현재
나주	일반산단	_	2724명	나주시 집계 538명
영광	전기자동차산단	1조 5000억원	8500명	현재 200명 미만(잠정)
광양	신금산단	-	1708명	현재 100명 미만(잠정)
화순	생물의약단지	2582억원	1265명	현재 100명 미만(잠정)
목포	세라믹산단	1700억원	500명	경제 및 고용효과 없음

▼인구 유입과 수 억원에 이르는 지 방세 수입 등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 됐던 광양 옥곡면 신금산업단지. 산 단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 임대 광고 플래카드 뒤로 잡초만 무 성하게 자라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누리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공방

새정치 "5600억원 지원 합의" 새누리 "지도부와 협의한 적 없다"

새누리 신성범 간사 사퇴 선언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 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의 소관 상임위 인 교육문화체육위는 이날로 9일째 파행 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 증 액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 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의 3자 협의 내용을 둘러싼 합의 여부를 놓고 진 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3자 협의 직후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

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과정에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새누리 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합의 여부를 둘 러싼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 퇴를 선언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만 류하는 여파가 이어졌다.

교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내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필요한 내년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오후부터 상임위가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 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의 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 과정 예산편 성 합의를 둘러싸고 혼선이 발생한 데 대 해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 사퇴를 선언 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전에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누리 과정 예산을 포함한 핵심쟁점에 합의했 다"고 거듭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이 여 야 간사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월권'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의 예산안심사소위는 새우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 으며 문화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지연되 면서 문화중심도시 콘텐츠 및 홍보 예산 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 증액에 차질이 우려되 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TA·예산안·민생법안 빨리 처리해 달라"

朴대통령, 새누리 지도부 초청 회동···새정치는 "시기 적절치 않아" 거부

김무성 "뒷받침 못해 송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김무성 대표 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 동한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 (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 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 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 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힘을 모아 많이 노력해주면 감 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 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초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 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빼앗길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동의를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외교·안 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 기가 된 것 같다"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느끼시겠지만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국민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 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 을 부탁드리고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

을 해나가면서 힘을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되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6박9일간의 다자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 "순방 기간에한·중,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성장전략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 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 스런 마음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